‘단속 사각지대’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잇따라

광주·전남 불법체류자 범죄율 늘어
마약 유통·사기 행각 범죄 급증
법적 보호 벗어나 관리단속 한계
“철저한 관리와 체계적 교육 필요”

전국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자 이들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법적 보호에서 벗어나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가 어려운 만큼 범죄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적발 건수는 △2021년 157건 △2022년 150건 △2023년 185건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의 경우 △2021년 274건 △2022년 289건 △2023년 359건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마약 투약·유통 등 마약범죄와 대포폰, 차명 통장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각종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광주세관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중국인 환치기 조직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적발,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2020년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방식으로 2800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17년 국내 대학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이들은 불법 환전 등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을 거쳐 수출입 업체 무역 대금,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까지 취급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온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세관은 지난 5월에도 가상자산을 악용해 2500억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태국인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불법체류자인 이들 부부는 나주시 임시 거주지에 시가 7억8000만원 상당의 야바(메스암페타민 계열 합성 마약) 1만1207정을 소지하며 투약·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압수한 마약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단속반이 적발한 사례 중 가장 많은 양이다.

광주출입국사무소는 마약 유통 및 판매 경위가 조사되는 대로 이들에 대해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보고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3만여명으로 이중 불법체류자는 41만명이다. 이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18.3%를 차지한다.

지난 2017년 25만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은 5년 새 63% 이상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단속률은 12.5%에서 3.6%로 하락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농번기를 중심으로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전 관리와 꾸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기 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본국에서 마약이 합법화된 경우 마약 유통·투약 등의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비자 발급 등을 안내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시는 체류 외국인 대상 정착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외국인주민과 관계자는 “광주외국인주민센터에서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복지 차원으로 무료 진료소 3곳 운영, 의료통역가 양성, 외국인 노동자 쉼터 3곳 지원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태극문양 손도장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손도장을 직접 찍어 완성한 태극문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 남구, ‘양림동 선교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국가유산청 ‘연구지원사업’ 선정
9월부터 6곳 대상 학술연구 진행

광주 남구가 오웬기념각과 우일선 선교사 사택을 비롯해 양림동에 소재한 기독교 선교 유적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에 나섰다.

남구는 16일 양림동 일원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에 대한 현황조사 및 세계유산적 가치 규명 등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을 위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21년 국가유산청이 추진한 ‘세계유산 등재 신규 목록 발굴 용역’ 결과에서 양림동을 포함한 선교기지 유적이 우선 추진 대상 8개 목록 가운데 4순위로 추천됨에 따라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을 위해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경쟁력을 갖춘 전국의 문화유산을 연구·발굴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광주 남구 양림동과 서울 중구, 대구 중구, 청주, 공주, 전주, 순천, 목포 선교기지 유적까지 8곳을 연구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남구 양림동은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여러 관문 중 첫 번째 과정을 통과했다.

잠정목록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위해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후보 목록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면 본 신청서 제출 전에 우선 잠정목록에 등재돼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전국 8곳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교기지 유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뒤 전체를 취합해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9월부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을 4개월간 실시, 120여년 전부터 양림동에서 꽃피운 근대 의료와 교육, 건축, 사상, 예술 분야의 세계유산적 가치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 대상은 오웬기념각과 우일선 선교사 사택, 수피아 홀, 커티스 메모리얼 홀, 윈스브로우 홀, 수피아여학교 소강당 등 6곳이다.

또한 남구는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칭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소통과 업무 협력을 통한 선교기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꾀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학술연구를 비롯해 수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며 “우리나라와 서양의 문화 접목을 통해 인간 존중과 평등 세상을 열었던 양림동 근대역사 문화의 인류 보편적 가치가 지구촌에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